월요광장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태어난다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이제 곧 봄을 알리는 꽃들이 각양각색으로 피어나면서 팍팍한 일상에 조금은 생기가 돌지도 모르겠다. 그 꽃들 중 하나가 모습이 유난이 특이하고 색색으로 화려한 튤립이다.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으로 잘 알려진 튤립은 본래는 야생화였다. 원산지는 텐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고산 지대다. 페르시아와 터키를 거쳐서 16세기에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1639년경에 네덜란드에서 역사상 가장 믿기 어려운 튤립 투기 광풍을 일으켰다. 그 유명한 '튤립 버블'이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으로 떼돈을 벌어서 튤립 졸부가 생기는가 하면, 반대로 폭삭 망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급기야는 국가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휘청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당시 유럽의 경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도대체 이해는커녕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다. 혹시 이때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집단으로 머리가 이상이 생겼거나 바보들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지어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어찌 됐든 이 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초기의 튤립 투기는 졸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 자랑하는 놀이였다. 이 꽃이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너도나도 튤립을 사재기하면서 가격이 수십 배 오르고 투기 열풍이 온 나라에 역병처럼 돌았다. 튤립 전용 거래소가 생기고 사전 예약제가 극성을 부리면서 튤립 뿌리 하나가 신부의 결혼 지참금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이때의 튤립 값은 하루에 26배까지 치솟아서 튤립으로 배나 성을 살 수도 있었다. 이런 광풍의 결과는 곧 튤립 값의 추락으로 이어졌고 모두의 파산이었다. 이쯤 되면 집단적 광기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집단적 광기는 그 피해자가 몇 사람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비극이다.

역사상 대부분의 집단적 광기의 주인공들은 아주 평범하고 근면하며 심지어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다. 분명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를 위한 광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저 '생각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광기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는 오히려 인식하고 자각하기가 훨씬 어렵다. 너도나도 같은 증상을 보이니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성찰할 이유는 더욱 없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뛰어드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흔히 집단 지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생각 없는 대중은 현명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으며 오직 위험할 뿐이다. 대중이 곧 바로 우중은 아니지만 얼마나 쉽게 한순간에 우중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점이다. 개인의 이성과 분별력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목소리 큰 다수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미망 때문에 대중은 우중으로 돌변하고 자발적으로 다수의 광기에 복종한다.

그렇다면 집단적 광기의 증세를 알아차리고 막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당연히 시민이다. 대중이 우중이 되는 것을 막아 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시민은 남 좋은 일을 하자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중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중과 시민의 차이는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가의 여부에서 생긴다. 그래서 탐욕과 욕망과 무분별함으로 방향 없이 항해하는 '바보들의 배'에 집단 탑승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미는 삶의 연대와 개인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서 순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모질고 거친 광기의 증세가 너무나 흉측하다. 이 광기의 근원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더 큰 상처를 내서 이익을 얻으려는 권력욕이기에 튤립 광기보다 더 반인간적이다.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 고야는 '이성의 잠은 괴물을 만든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자신의 판화집에 새겼다. 고야의 이 말을 공동체적 의미로 풀어보면 '시민이 없는 곳에서 괴물이 태어난다'가 아닐까. 시민은 이성을 중하게 여기고, 우중은 이성을 잠재우면서 괴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래도 우리가 우중이 될 이유가 있겠는가.

꿈꾸는 2040

국가(國歌)란 무엇인가

차승세
위민연구원 이사

국가(國歌)란 한 나라(國家)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정되어 통용되는 노래이다. 그래서 각 나라 국가의 특징은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내용이 많다. 가장 오래된 국가는 영국의 국가(God Save the Queen)이다.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애국적인 노래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후에 영국 황실 의식에서도 불러지다가 국가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愛國歌)이다. 애국가라는 노래 제목 그대로 나라 사랑을 고취하는 노래이다. 나라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노래로서 갑오개혁 이후로 상당히 많은 애국가가 만들어졌다. 1896년 '독립신문'에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 가사가 게재됨을 시작으로 교회의 교인들과 학당 등에서 지은 다양한 애국가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광무개혁을 진행하던 대한제국 정부는 국가의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애국가'를 정식으로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당시 정부는 그동안 난무했던 애국가를 하나로 정리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많은 애국가가 지어졌고, 애국가의 창작은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자주 독립과 부국강병의 내용을 담아 널리 보급되었다.

그 많은 애국가 중 현재 불리어지는 애국가의 가사는 친일 부역자 윤치호 또는 항일 애국자 안창호 선생 등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으나 어느 것도 공인되지 않았다. 곡은 1936년 친일 부역자 안익태가 만들었다. 그해 안익태는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을 찾아가 이 곡을 함께 불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국과 일본의 교포들에게 이를 알렸다. 당시만 해도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알리가 없던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사용하게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지금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행사에 사용되고, 교과서에 실려 각급 학교에 널리 보급되면서 실질적인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안익태의 애국가는 정식으로 국가로 제정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불리어지다 국가가 된 것이다. 안익태의 애국가가 관행상 '국가'로 불려왔지만,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없다. 1960~70년대에도 새로운 애국가를 제정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심지어 전두환 군사정권 때에도 '국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애국가의 감상적인 곡조의 문제점을 들어 새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다.

프랑스의 경우 확인된 나치 부역만으로도 사형감이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 미국 등에서도 비열한 부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부르는 상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가는 가장 중요한 나라의 상징 체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일 부역자가 작곡한 비애국적인 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애국가 같은 국가(國家)의 기본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3·1혁명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

우리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관대함을 넘어 실패한 나라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욕적인 역사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독립을 그리며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투사와 순국선열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애국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학생독립운동의 발원지인 광주일고(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는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를 교체하기로 했다. 광주일고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이흥렬씨가 작곡한 교가를 올해 안에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작곡자의 친일 경력이 거론된 뒤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학생, 학부모, 교사 등 90%가 넘는 교체 요구가 있었다. 학생독립운동의 발원지에 친일 잔재를 남겨둘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다. 애국민(愛國民)이 이끌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다. 이런 뜻 깊은 시점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애국가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관행에 젖어 '역사 정의 구현'을 무시한 채 아직도 색깔론에 빠져있는 일부 세력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쟁(政爭)에 앞서 국가는 나라의 얼굴이요, 민족의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 고

원전 해체 핵심 기술 확보 시급하다

장세일
전남도의원·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장

원자력 시설 해체는 해당 시설 종사자는 물론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수명이 끝난 원자력 시설에 행하는 모든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원전의 해체란 원전 운전을 정지하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부지의 무제한적 사용 허가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염·절단·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감시 등 모든 관리와 기술적 업무를 포함한다.

원전 해체 때는 안전성 확보가 필수로, 해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과 주변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해체에는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영구 정지 전 준비(2년), 사용 후 핵연료 냉각 및 안전관리(최소 5년), 제염 및 해체(6년), 부지 복원(2년)의 순서로 추진된다. 해체 준비 단계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재고량을 평가하고 방사선 측정을 통해 시설의 오염 특성을 조사한다.

원전 해체는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에서 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원전은 149기로, 이 중 해체가 끝난 원전은 19기, 해체 진행 중인 원전은 100기다. 나머지 30기는 해체를 앞두고 있다. 운영 중인 원전 437기도 2050년이면 대부분 작동을 멈춘다. 원전 수명이 30~60년인 걸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도 아니다.

국내에서도 고리 1호기가 2017년 수명이 끝나 수명 연장을 심사 중이다. 한빛원전 1·2호기도 2025년 수명이 끝나는 등 가동 25년을 넘긴 원전만 9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전 종료를 주장해 온 탈핵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원전 해체를 오랫동안 터부시해 온 친핵 진영에서도 해체 이야기가 슬며시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전 해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아직 많지 않다.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 정도다. 해체 경험도 미국 15기, 독일 3기, 일본 1기뿐이다. 우리나라는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다. 다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TRIGA MARK-2·3)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꾸준히 해체 기술을 쌓아왔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 38개 중 17개를 현재 확보했는데, 나머지 21개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해 2030년까지 상용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해체 종합 연구센터도 올해 문을 열 계획이다.

원전 건립은 가능한데 해체를 왜 못하냐는 의문이 드는데, 이는 방사성 폐기물 때문이다. 110만㎾급 원전 1기를 철거하면 폐기물이 50만~55만t 가량 나오는데, 이 중 약 6000t이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전 해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부위만 골라서 떼어 내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제염'이라고 하며, 제염을 잘할수록 방사성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다. 원전 해체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절반, 즉 3000t으로 줄여 제염으로 오염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폐기물은 다른 원전을 지을 때 재활용할 수 있다.

원전 해체 기술은 38개 기술이 모인 해체 오케스트라라 불리며 그 꽃은 제염과 철거 작업이다. 학계에서도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아직 초기 인력 양성 수준이다. 현재는 원전 해체 표준 설계 기술 개발, 원전 해체를 위한 냉각재 계통·기기 제염 상용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수립된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로드맵은 사업 관리 분야와 요소 기술 분야로 구분된다. 사업 관리 분야는 엔지니어링 및 사업 관리, 공정·공사비·물량 평가, 해체 공학·설계 기술, 방사선 안전·특성 평가, 안전·환경·품질·비상 계획 등이며, 요소 기술 분야는 제염 기술(계통·기기), 절단·철거 기술, 폐기물 처리·처분 기술, 재활용 기술, 방사선 측정·선량 평가, 부지 복원 기술 등이다.

모든 기술을 확보해야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초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미국이 만드는 걸 어깨 너머로 보며 원전 건설 기술을 배운 것처럼, 원전 해체도 먼저 외국 기업과 합작해 진행하면서 부족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원전 해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

社 說

아이들 볼모로 한 집단행동 엄정 대처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에 광주 지역 상당수 사립 유치원들이 동참할 조짐이어서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학일이 다가왔지만 유치원별 개학 여부마저 불투명해 학부모들은 애가 타들어 가는 상황이다.

광주에서 어제 오후 6시 현재 개학 연기를 결정한 유치원은 딱 한 곳에 불과하지만 교육청 현황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48곳이나 된다. 전체 159개 유치원 가운데 30.8%가 개학 연기 또는 연기의 여지를 둔 셈이다. 반면 그제 한유총 광주지회 총회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107개 유치원(9곳은 위임) 가운데 102곳(95.3%)이 개학 연기에 찬성했다고 광주지회는 밝혔다.

이처럼 개학 연기 유치원 수가 크게 엇갈리고 무응답이 많아 개별 유치원의 개학 여부를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유총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의 철회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유치원 3법'과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들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해 사실상 '집단 휴원'을 강행하는 것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인질로 삼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교육청은 한유총을 계속 설득하되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 나라' '못 낸다' 말로만 상생 외치는 지자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지방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광주·전남 '상생'이란 말은 온데간데없다. 광주시와 나주시·전남도는 그동안 공동발전기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 왔다.

최근에도 광주시는 혁신도시 내 민간분야 지방세 활용 방안을 전남도에 제안했다. 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 비용을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민간 지방세로 충당하고, 공공 기관 지방세는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당장 기금 조성이 어렵다는 나주시의 완강한 입장에 대해 광주시가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번에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혁신도시 내 민간이 낸 지방세까지 공동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2006년 합의한 협약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공공 기관이 납부한 전체를 재원으로 하는 주장은 협약과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혁신도시 조성 비용을 이유로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 혁신도시를 합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 각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언제까지 꼴사나운 다툼만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입만 벌리면 상생을 외치던 시도가 결국 돈 앞에 무너졌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양쪽 모두 전향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無等鼓

'하얀 전쟁'

지난 1983년 실천문학에 연재됐던 안정효의 장편 '하얀 전쟁'은 작가 자신의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토대로 한 소설이다. 월남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파멸해 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사실적이면서도 가혹하다.

소설 속 주인공 한기주는 베트남에서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던 중 소대원이 40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에게 어느 날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은 변진수라는 전우가 찾아온다.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변진수는 다짜고짜 한기주에게 권총으로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한다.

영화로도 제작됐던 '하얀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은 베트남전의 참상과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다. 어두컴컴한 계곡에 투입돼 함정, 부비 트랩, 독화살과 같은 죽음이 도사리는 밀림을 정찰해야 했던 병사들의 이야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처럼 생생하다. 파병 부대인 백마부대와 죽음을 상징하는 흰색에서 '하얀 전쟁'이라는 제목을 따왔다고 하는데,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게 되는 인물들의 삶은 극적이다 못해 처연하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의 공동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하노이 선언'도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북한과 미국의 화해 분위기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실패는 핵을 대상으로 한 합의가 얼마나 지난하고 난해한 과정인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더욱이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점차 복잡하게 전개되는 형국이다. 패권 전쟁으로 확대된 미·중 갈등, 초계기 도발로 위기를 조장하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남중국해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중국 군용기의 잇단 동해상 진입은 북핵 문제와 맞물려 고차원적인 해법을 요한다.

월남전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후유증을 남겼다. 당사국인 미국과 베트남뿐 아니라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했던 우리의 희생도 그에 못지않았다. 그럼에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피로 얽힌 베트남이 이번 회담의 개최지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얀 전쟁'의 가없는 고통과 희생이 언젠가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길 기대한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정치부 220-0632 / 여론매체부 220-0652 /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전남본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